

한중 양국의 대 북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본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비핵화

조청봉
고려대학교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0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한중 양국의 대 북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본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비핵화

조청봉
고려대학교

1. 서론

천안함 사건이 동아시아에 몰고 온 위기상황과 한반도비핵화 과정의 연관성을 이해하려면 우선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 역학구조와 주요 국가들의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본문은 동아시아에서 냉전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경쟁협력체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북한 상황에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연구를 기초로 한국과 중국의 대 북한 인식과 딜레마를 설명하고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 북한 전략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표현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 2009).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로서 주은래 총리가 '입술과 이'의 관계라고 표현하였다(周恩来 1990).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국가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특히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내부에서는 중북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沈驥如 2003; 金強一 2008).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지지' 등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 북한 전략은 대체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면으로 보기에 맥락을 비슷하게 유지해 오던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 모순과 취약함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북한을 사이 두고 모순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한국과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은 한중 양국의 전략적 고민,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비핵화 과정의 관계 등을 토론할 것이다.

본문은 제2장에서 천안함 사건과 그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 역학구조에 대해 언급할 것이고 제4장에서는 북한문



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전략적 안보고민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비핵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2. 천안함 사건과 동아시아의 위기상황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중국 황해) 백령도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4월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면서 대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청와대 2010).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정되었고 한국은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였다.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외교통상부 2010). 비록 의장성명에는 북한을 공격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은 이로써 정리되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된 동아시아의 위기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의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였다. 결국 이번 위기는 한반도의 범위를 벗어나 중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경쟁으로 승격하였다. 한국은 5월 27일 서해에서 반 잠수함 훈련을 진행하였고 한미 양국은 6월 서해에서의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미국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의 서해(중국 황해)진입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강렬한 반응을 촉발하였다. 한미 양국은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북경을 포함한 자신의 핵심 지역이 미국 항공모함의 위협에 노출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한미 군사연습에 앞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동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은 7월과 8월에 각기 ‘불굴의 의지’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Ullchi-Freedom Guardian) 군사연습을 진행하였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은 동해(일본해)에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 특히는 군부의 고위인사들이 한미합동훈련에 대하여 강력한 발언들을 하면서 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듯 했다(羅援 2010; 楊毅 2010)¹. 7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가한 미국 힐러리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발언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영토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8월 초에 미국 ‘조지 워싱턴호’는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미국과 베트남은 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천안함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9월 7일 다투위도(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도 중국에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그에 반응해 중국은 천안함 직후인 6월부터 중국 황해, 동해, 남해에서 최소한 9차례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환구시보〉 2010/9).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였고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중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시켰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군사대응은 미국의 한층 수위 높은 억제정책으



로 표현되었고 급기야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전략 모순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이번 위기 속에서 지역 사무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한국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 한국 또한 중국의 ‘막무가내’식의 ‘북한 감싸기’에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과 그 후속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분석해보면 가장 크게 손해를 본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군인이 사망하였다. 4,800만 명의 인구와 60만 명의 한국군인 수에 대비해 보면 대략 백만분의 1의 인구와 1.2만분의 1의 군인을 잃은 것으로 된다. 이 비례치를 중국의 인구와 군인 수에 대입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얻어질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 이래 견지해 왔던 “경제건설을 위한 안정된 주변 환경 구축”이라는 전략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던 중미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미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본격적으로 억제정책(containment)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공격 주체로 지목되는 북한은 비록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지만 원체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취약한 특성 때문에 큰 손해는 없어 보인다. 반면에 북한이 추구하는 미국의 주의력 끌기와 한국 해군에 대한 보복, 국내체제에 대한 결속력 제고 등 측면으로부터 볼 때 이번 사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자체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조사결과를 주장함으로써 천안함 사건과 이후 한반도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일본은 하토야마 총리의 사임을 맞았지만 7월 25일 한미군사연습에 관찰자(observer)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특혜를 얻게 되었다. 베트남은 비록 남해문제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같았지만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인가는 더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역외 국가로서 이 지역에서의 “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를 이용하여 지역사무에 관여해왔다(金強－2004).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아시아에 되돌아 올 수 있게 되었으며(return back to the Asia)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17.5km의 국경을 가지고 있는 외에 중국과는 1,334km, 한국과는 248km의 국경을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과 중국은 북한형세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동시에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공통의 문제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광범위한 협력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문제에서 전략적인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천안함 외교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차이는 다시 한 번 증명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은 자신의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방적인 ‘미국 일변도’ 전략은 합리적인 것인지, 중국의 지속적인 ‘북한 감싸기’ 또한 합리적인지 고민해 보는 동시에 한중 양국의 상호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넓은 범위와 더 높은 차원에서 토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와 미중 G2체제

동아시아는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의 '공동 관리' 체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은 동아시아지역이 아직도 냉전체제 속에 처해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중국의 수위 높은 대응도 동아시아가 더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1)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동맹국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을 무렵 미국과 소련은 얄타회의, 카이로 회의, 포츠담 회의 등 일련의 회의를 통하여 전후처리와 세력범위에 관해 합의를 달성하였다. 얄타체제는 동아시아를 소련과 중국대륙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진영과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진영으로 갈라놓았다. 1950년의 한국전쟁과 3년 후의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북위 38도 군사분계선을 사이 두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확립되었음을 공식화하였다.

45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전 세계적 범위의 냉전은 소련의 몰락으로 일단락이 되는 듯 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법률적인 계승자가 되었고 이전의 사회주의 동유럽권은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상징이었던 두 개의 동맹기구는 부동한 운명을 맞이했다. 사회주의진영의 바르샤바조약기구는 해체된 반면 자본주의진영의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그 세력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과 러시아의 북방열도에 대한 점령 등은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아직 해체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상태는 남북한의 분단으로 표현되는 한국과 북한의 갈등과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개발과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어 지역 정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상당기간 누적된 국가실력의 차이로 북한의 전략목표가 비록 한반도 남반부에 대한 통일이 아닐지라도 미국과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중국의 미국 세력에 대한 위협감으로 인해 중북협력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아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냉전구조를 장기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G2 체제

2009년 4월 G20 런던 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연례 전략대화를 열고 모든 차원에서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은 국력이 성장한 중국을 인정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국제적 의무를 분담시키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G2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소극적 대응과 심지어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인식에 시각적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실력과 중국의 객관적인 국력으로부터 분석할 때 이 지역에 존재하는 상대적 역량을 미중 양국체제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 재부의 주요한 생산지로서 미국의 세계전략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괌과 사이판 등 영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와 군사항구, 대략 10만 명 정도의 군인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존재는 실질적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전략중심은 중동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과도한 국력소비와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상대적 쇠락을 초래했다. 중동지역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정리된 미국은 2010년 “아시아로 돌아올 것”(return back to Asia)을 선언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다시 강조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가이고 최근 30년의 초고속 경제 성장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的偉大復興)을 꿈꾸고 있다. 2010년 8월 일본정부는 2.4분기 경제실적을 통보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이 일본을 추월하였음을 밝혔다. 경제력은 신속하게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력의 신속한 성장은 주변 국가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항공모함 계획을 비롯한 해군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군사기술의 우주공간 확장에도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 역시 ‘도광양晦’(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로부터 ‘유소작위’(有所作為 할 것은 한다)로 선회하면서 지역과 세계 사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을 맡으면서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국력의 상대적 쇠락과 전략중심의 잠시 이동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동아시아의 세력 분배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담론들이 세계적 범위 내에서 적극 진행되게 하였다(Chan 2008). 천안함 사건은 냉전 종료 후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가속화 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백학순 2010). 최근 중국과 미국의 긴장한 대치 국면은 천안함 사건 때문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경쟁 구도 속의 구조적 모순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수용하는 한편 그 부상하는 속도를 늦추면서 자신의 이익공간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전재성 2008).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적극 방어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0년 1월 29일, 미국은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수출 계획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 참모총장의 미국 방문계획을 취소하였다. 2월 18일,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달라이 라마를 회견하였다. 미국은 무역수지와 환율문제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보유량을 감소하면서 미국에 대응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사무에 적극 참여하였다. 반면 중국은 유례없이 밀도 높은 군사훈련을 진행하였고(5개월 동안 9차례) 고위층의 강도 높은 발언도 발표하였다². 9월에 일어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은 다시 한 번 미국의 위협을 의식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세력경쟁은 현재진행형으로 지역의 미래 발전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대 중국 억제정책의 최전방에 서있다고 인식하고 한국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북한을 감싸는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역학구조 속에서 중국과 한국의 대 북한 전략은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순은 상대방의 전략적 고민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국가전략의 시각변화를 통하여 해결 가능성이 존재한다.

4.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안보 전략적 고민

‘북한문제’라는 제기 범 자체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표현에 반감을 느낄 것이고 중국 또한 오랜 시기 동안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영역이다. 하지만 북한 외부 세계에서는 상당 기간 논의해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학술적인 접근과 해석을 하려고 한다. 한국에 있어서 ‘북한문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의 미 개방 상태로 인한 안보,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력이다(金強— 2006). 그중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문제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홍양호, 2009), 북한의 인권문제, 후계 계승문제, 북한의 붕괴 등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최재천 2007). 중국 베이징대학의 주평 교수는 동아시아 안보 의미에서의 북한문제는 평양정권이 냉전 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朱鋒 2005). 본문은 ‘북한문제’를 세계적 범위의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 상대적 약소국인 북한이 새로운 세계 체제에 편입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난 불안정한 상태라고 규정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북한문제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은 불가피하다. 2010년 10월 벨기에에서 열린 ASEM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말했듯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한중 양국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서로의 안보적 고민과 딜레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1) 한국의 안보전략적 고민

한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은 국내 정치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소위 남남갈등이라고 불리는 한국 사회의 의견 대립은 정치권, 여론, 국민을 ‘보수’와 ‘진보’ 두 진영으로 선명하게 갈라놓고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국민의견은 명확하게 두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경향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직접투표에 반영되는데 그 결과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국회의 구성구조는 바로 한국의 대외정책으로 나타난다. 지난 10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대 북한 정책은 선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정책은 국가 행위자의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실행과정 역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북한문제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고 10년을 넘어서는



중장기적인 확고한 정책을 견지할 수 없다는 모순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이다.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처럼 국민의견을 통일할 수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국민합의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정책을 장기간 견지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내재적 고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정권변화에 따른 급격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절반 인구와 대부분의 재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지정학적 취약성 때문에 한국은 북한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무력도발행위나 북한 고위 장교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은 한국에게 실질적인 안보위협으로 느껴진다. 수십 년 쌓아둔 재부가 한 순간에 파괴되고 훼손될 수 있는 전쟁의 결과 앞에서 '가진 자'의 두려움이 '없는 자'의 배짱 앞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비록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에 성공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성장하고 종합적 국력이 북한을 훨씬 앞섰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무력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운신의 공간이 작다. 한국은 북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4강외교'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협력, 경제수단 등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효과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했다. 우선 한국은 주변 4강과 국제사회를 직접 움직일 능력이 없었고 또한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도 갖추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물줄기를 준수하면서 변화무쌍한 북한의 전략에 대처하기는 한국에게 쉽지 않는 과제이다. 북한의 무력충돌 '벼랑 끝 전술'에서 항상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에게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의 결여는 또 하나의 고민일 것이다.

한국은 북한문제의 해결과 국가발전의 대전략에서 미국과 중국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 정치, 사회 등 전반 이익에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현재의 한국은 탄생으로부터 산업화, 민주화, 현대화 과정에 미국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요해진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특수한 영향력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의 부상은 현실로 다가왔고 지리적 특성상 한국과 중국은 경제, 안보 이익 상에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지나친 미국의존도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어 왔었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홍현익 2010; 엄상운 2010). 한국은 현재 정치,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배에 한발을 놓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배에 다른 한발을 놓은 상황이다. 만약 미중관계가 충돌 없이 비슷한 방향으로 순항을 한다면 좋겠지만 이번 천안함 사건처럼 미중이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추구한다면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순된 이익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취약한 입장은 미래의 국가 발전에도 큰 고민일 것이다.



(2) 중국의 안보 전략적 고민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국 선언은 중국에게 안보적 부담을 조성하였다. 중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어떠한 시각과 목적에서 진행되었든 시간에 주변 국가의 핵 보유라는 사실은 중국의 안보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미국과의 대립 과정에 완충지대가 필요했지만 그 완충지대가 이젠 전략적인 부담으로 전략하는 고민을 안게 되었다.

중국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태가 ‘급변 사태’ 혹은 ‘국가 붕괴’로 이어질 경우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권력공백에 처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대량살상무기는 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무기가 국경을 통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흘러들거나 테러분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급변 사태’는 대규모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숫자는 대략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박창희 2009; Stares and Wit 2009).³ 북한 난민은 중국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강성학 교수는 국가 지도자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상유지의 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강성학 2010, 687).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결정이 오랜 시기 동안 현상유지를 추구해 온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변화된 북한의 상황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중국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을 겨냥한 외부세계의 자극이 북한 상황의 악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에 거대한 안보위협이 된다는 명확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으로서는 야속할 수밖에 없는 ‘북한 감싸기’를 계속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안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 국가적 과업을 가지고 있다. 국공내전의 아픔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연관되어 있는 대만문제는 미국의 개입으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11’ 이후 미국 전략의 중심이 중동으로 이동한 ‘전략적 기회 시기’에 중국은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 중동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미국이 다시 동아시아에 되돌아와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더 증가시켰다. 만약 북한문제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관심을 일정 정도 흡수한다면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국가안보이익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沈丁立 2009). 북한문제가 미국의 전략대로 해결되고 한반도에 완전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립된다면 미국은 대만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억제정책을 자유롭게 구사할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한미군사연습과 중일간의 센카쿠열도(中 釣魚島) 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위협을 실감하게 하였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시켰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억제정책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천안함 사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이 계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멸망은 아직도 중국의 지



도자들과 인민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세계에 오직 5개의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동맹의 부재는 중국에게 항상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느끼게 한다. 평화적 이행(peaceful evolution)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2006년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의 '변환 외교'(transformation diplomacy)의 개념에 대해서 중국의 지도자와 외교관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Nye 2009). 중국은 2001년에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협력적 태도를 보였고 2008년에는 올림픽경기를 주최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국가전략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기 보다는 편승(bandwagon)에 가깝다. 중국은 2차 대전 후와 냉전 후 미국이 창조한 세계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적응하고 적극 가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에 적대적이었으며 중국 자신이 국제사회의 시스템에 이미 가입하였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王小東 2006). 서방세계의 의식 속의 중국은 시장경제와 공산주의라는 모순된 개념이 결합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부호이다. 서방세계의 '중국 위협론'과 '중국 붕괴론'은 중국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해석이다. 중국을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협은 현실이 되어 세계를 위협할 것이다(Nye 2009). 중국은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교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외부세계와의 더 많은 교류는 더 많은 모순을 유발할 수 있고 중국의 협력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안보딜레마의 악성순환에 빠진다면 중국이나 동아시아의 이익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5. 결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북한의 비핵화가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철수하였다. 동시에 한국은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여 있고 세계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고 있다. 반면 북한은 1993년의 제1차 핵 위기부터 2006년과 2009년의 두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핵무기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천안함 사건은 북핵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이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신 냉전으로까지 거론되는 이번 위기상황은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미중 대립을 초래하였고 동아시아지역에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이번 상황은 당사국들 사이의 불신을 증가하였고 대화의 정치적 분위기를 파괴하였다.

남북관계는 현 정부 이래 가장 열악한 관계로 추락하였고 단시기 내에는 효과 있는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천안함 사건과 비핵화를 분리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에 대한 위협감으로 인해 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의 위기지수를 상승시켰고 중국의 안보에 충격을 주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고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다



시 한 번 ‘피 포위 의식’을 느꼈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게서 찾고 있다(〈노컷뉴스〉 2010). 한중 양국의 이러한 모순은 국가이익의 상호충돌이라는 구조적 모순과 북한문제에 대한 서로의 고민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전략적 모순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국가의 전략과 국가이익이 일치해야만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 역시 협력의 시작이다. 한중 양국의 북한문제에 대한 구조적 모순과 전략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문은 그 해결방안을 국제정치, 국가, 사회, 개인의 측면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첫 번째, 한국은 국제정치 역학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국가전략은 전 방위적으로 미국에 너무 치우쳐 있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관심도가 낮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국력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에 대한 인식이 결핍하다.

두 번째, 한중 양국은 정부와 군부 고위층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양국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어울리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의 ‘2+2 회담’ 같은 정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한중 양국은 여론이 양국 관계 중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여론의 방향을 정확하게 유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일부 여론의 책임 없는 보도는 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국민들의 감정에 상처 준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민감한 시기에 여론을 통한 비방과 자극은 양국 관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네 번째,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학계,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들의 개인적 유대 관계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가전략은 구체적인 인물에 의해 결정되고 상호적 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가한다. 개인 사이의 교류가 깊어지고 국가 사이의 대화에 신뢰가 깊어질수록 양국 사이의 전략적 모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註)

¹ 미국 조지 워싱턴호의 황해 진입에 대해 중국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인 뤼위안(羅援)소장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권은 이미 ‘만월형’을 이루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http://news.sohu.com/20100718/n273578676.shtml>.

² 4월 22일, 중국 국방대학교 양이 소장(楊毅少將)은 미국 국방부 관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밝힌바 있다.

<http://war.news.163.com/10/0424/10/651F1N4400011MTO.html>.



³ Stares와 Wit는 북한급변사태시 약 100만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50만은 중국으로, 30만은 한국으로, 그리고 20만은 러시아와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본다(Stares and Wit 2009).

참고문헌

- 강성학. 2010. 《무지개와 부엉이》. 박영사.
- 박창희. 2009.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한반도 전략 평가 2009-2010〉.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백학순. 2010. “천안함 사건과 동아시아 신(新)질서의 형성.” 〈정세와 정책〉 8월호.
- 엄상윤. 2010. “동북아의 긴장고조와 한반도문제의 향방.” 〈정세와 정책〉 9월호.
- 외교통상부. 2010.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문” 7월 8일.
- 전재성. 2008.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제51권 제3호 12월.
- 청와대. 2010. “대통령 대 국민 담화문” 5월 24일.
- 최재천 의원실. 2009. “북한문제 해법, 유럽모델로 가능한가?” 〈2007년 통일외교 1차 세미나〉. 서울. 1월.
- 통일부. 2009. “2009 통일백서”
- 홍양호. 2009. “정부, ‘북한문제’ 큰 틀에서 북핵문제 해결 모색.” 〈통일한국〉 2009년 11월.
- 홍현익. 2010. “김정일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정세와 정책〉 10월. 〈노컷뉴스〉. 2010. “심각해지는 중국내 ‘협한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8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43524>.
- Chan, Steven. 2008.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New York: Routledge Talor & Francis Group.
- Dingli, Shen. 2009. “The Sino-US Relations and Alliance Structures in Northeast Asia.” In *Sino-U.S.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ed. Taik -Young Hamm and Kun Young Park.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Stares, Paul B. and Joel S. Wit. 2009.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42*(January): 23.
- 周恩来. 1990. “抗美援朝,保衛和平”, 《周恩来外交文選》,北京:中央文献出版社.
- 沈驥如. 2003.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弈,世界經濟与政治,2003



年第九期.

- 金強一. 2004. 美日東北亜区域戰略与朝鮮半島問題, 《当代亞太》2004年第9期.
- _____. 2006. 東北老工業基地的振興与朝鮮半島問題,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年6月 第39卷第2期.
- 朱 鋒. 2005. 六方會談:“朝核問題”還是“朝鮮問題”?, 《國際政治研究》2005年第3期(總第97期).
- 秦亜青等. 2006. 中国大戰略:問題与思路. 《學術界》2006年第二期 중 왕샤오둥(王小東)의 발언.
- 彼得·貝克, 梅利莎·哈納姆, 梅可·納卡萊. 2007. 朝鮮核試驗之后, 《國際問題論壇》2007年春季号(總第46期).
- 金景一·金強一. 2008.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对我国的影響研究,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年8月第41卷第4期.
- Joseph S. Nye, Wang Jisi. 2009. 中国軟实力的興起及其对美国的影響, 《國際關係理論》2009.
- Joseph S. Nye. 張小明 역. 2009. 《理解國際冲突:理論与歷史》. 上海世紀出版社.
- 羅援, 2010. “解放军少将称美国已对中国形成‘满月形’包围.”
<http://news.sohu.com/20100718/n273578676.shtml>(검색일: 2010. 10. 28).
- 楊毅. 2010. “我少将激辯美高官团 直言美是中国最大威胁.”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0-04/790183_2.html (검색일: 2010. 10.18).
- 環球時報. 2010年 9月, 外媒称中国提前黃海軍演 中美大碰撞已開始.
http://news.xinhuanet.com/world/2010-09/13/c_12547984.htm.
- 〈環球時報〉. 2010. “我少将激辯美高官团 直言美是中国最大威胁.” 4월 23일.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0-04/790183_2.html.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원(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최은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30) ehchoi@eai.or.kr

